

경제관계장관회의

24-9-4

(공개)

# 어촌·연안 활력 제고방안

- 다시 돌아오고, 찾고싶은 연·어 프로젝트 -

2024. 5. 13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어촌·연안 활력 제고방안 [요약]

## I 추진배경 및 문제점

### 1. 추진배경

- (인구감소) 저출생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\*가 본격화되고 있으며,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\* 지정('21년 행안부)  
\* 어촌·연안이 위치한 74개 시·군·구 중 31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
- (어촌소멸) 어촌은 도시·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,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직면(인구감소율 농가 대비 3배, 고령화율 전국 대비 2.5배)  
\* 고령화율(전국/어촌) : '10년 9.1% / 23.1% → '15년 13.1% / 30.5% → '23년 18.2% / 48%  
\*\* 어가인구 : '18년 12만명 → '23년 8.7만명(△27.5%) / 농가인구 : '18년 231만명 → '23년 208만명(△9.9%)
- (현장소통) 어촌의 현실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촌주민, 수산업 종사자 등과 소통하며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  
\* 동·서·남해권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민생현장의 애로사항 청취

### 2 문제점

- (어촌) 열악한 정주여건\*, 양질의 일자리 부족,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 진입도 어렵고,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  
\* 삶의 질 만족도 조사 : 도시(6.3) > 농촌(5.7) > 어촌(5.2) > 섬 지역(3.6) ('23, KMI, KREI)
- (연안) 해양레저·관광은 계절적 성수기가 존재하고, 복합 관광시설 미비와 연계 콘텐츠 부족으로 추가적인 가치 창출에 한계
- (기존정책 한계) 기존대책은 수산업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했으나, 양질의 일자리 부족, 어촌의 낙후된 이미지로 청년 관심유도 한계

☞ 소멸위기에 직면한 '어촌'과는 달리 '연안'지역은 해양레저·관광에 대한 대국민 관심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 추진

## II 어촌·연안정책 추진방향

- (정책 대전환) 청년의 관심 유도를 위해 '어촌\*'과 '연안\*\*'을 통칭한 '바다생활권' 중심으로 수산업·해양레저 등 관련 정책을 연계

\* 호수·바다에 인접한 어항 배후지역 중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·면·동(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)

\*\* 연안해역(바닷가·영해), 그리고 연안해역으로부터 500m이내 육지(연안관리법)

- (상호보완)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·정주여건을 해양관광객으로 보완하고,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콘텐츠,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 제고
- (정책범위) '어촌'과 '연안'에서 실거주하는 국민 390만명\*이 살고, 어촌·연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간
  - \* 어촌 조사구역(어항과 배후지역 등) 내 통신망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추정(KMI)
- (경제가치) 수산업·가공, 해양레저·관광 등 연계로 경제적 가치 제고
  - \* 어촌 매출액 2.7조원 → 바다생활권(어촌+연안) 매출액 40조원('22년, 카드매출 추정)

☞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'살고 싶고,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' 조성

비전	풍요롭게 살수 있고,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(어촌+연안) 바다에서 시작되는 민생·경제 활력 제고		
목표	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 거점 확산	바다생활권 매출액 '22년 40조원 → '27년 50조원	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확산
세부 추진 과제	<b>전략 1</b>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 거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어촌·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: 민간투자 유치 확대</li> <li>② 도시형 바다생활권 : 부산, 인천 등 → 해양수산 융·복합 기능 강화</li> <li>③ 지역형 바다생활권 : 지자체 맞춤형 특화전략 마련</li> </ul>		
	<b>전략 2</b>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스마트·자동화 혁신으로 수산업 매력제고</li> <li>② 어촌계 어장 활용 수산업 일자리 개방</li> <li>③ 청년 등 신규 인력 진출 확대 ('22년 1,256명 → '27년 1,800명)</li> <li>④ 부가가치 창출로 수산업 소득 증대</li> </ul>		
	<b>전략 3</b>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어촌에서 즐기는 체험 여행</li> <li>②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바다쉼터</li> <li>③ 해양레저·관광 연계로 머물고 싶은 여행</li> </ul>		
	<b>전략 4</b>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주거·교통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</li> <li>② 의료·교육·정주여건 등 복지체계 개선</li> <li>③ 국민에게 편리한 정보 제공체계 구축</li> </ul>		

### Ⅲ 추진방안

#### 1.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 거점

❖ 어촌·도시·지역 특성에 맞춘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.

- (어촌·어항) 민간투자 연계한 경제생활 거점 확대
  -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와 결합하여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 강화
    - \* 투자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민간투자 수요 적극 발굴
  - 국·공유지(약 5,800만평) 활용,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해양·수산 기업을 유치하는 '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' 추진
- (도시형 바다생활권) 부산, 인천 등 해양도시 → 해양수산 융·복합 기능 강화
  - 부산, 인천 항만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해양관광 거점 조성(~'28)
  - 수산물 가공·유통·수출 집적화 단지(<sup>24년</sup> 2개소, 목포·부산) 확대
- (지역형 바다생활권) 지자체 맞춤형 바다생활권 특화 전략 마련('25.上)
  - 어촌·연안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(31개소) 우대, 해양·수산 분야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및 관련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

#### 2.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

❖ 스마트 기술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양질의 수산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
- (기술혁신) 스마트·자동화 혁신으로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
  - 어선어업은 '27년 이후 규제를 50% 줄이고, 어업 디지털화 추진
  -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스마트·자동화 기술을 보급하여 원격으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
- (어촌계 어장) 마을어장 심사·평가제 도입, 양식장을 청년 등에게 임대
- (신규인력)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, 어선·양식장 임대지원 확대, 어촌계 개방시 인센티브 등 신규 어업인 양성

### 3.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

❖ 어촌·연안의 다양한 콘텐츠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.

- (체험형) 갯벌, 해녀 등 어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확대
  - 어촌체험휴양마을(132개) 스탬프투어, 숙소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
  - 유희시설 활용 어(漁)케이션(現 11개소) 활성화, 소규모 관광단지 등 연계
- (힐링형) 청정 해양생태계와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바다쉼터 조성
  - 해양치유센터(5개소) 프로그램 발굴,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, 국민안심해안을 활용한 공원 등 조성, 반려해변(149개소) 활성화 등
- (해양레저형) 서핑, 스쿠버 다이빙, 요트,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 연계
  - 해양레저거점을 확대(<sup>23년</sup> 7개소 → <sup>24년</sup> 8개소)하고, 인근 어촌관광 연계
  - 지역별 해수욕장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등 특색있는 관광콘텐츠\* 발굴

\* (레저) 서핑(양양) / (문화) 반려동물 동반(강릉, 거제) / (향토체험) 어촌지역축제(서산, 남해)

### 4.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

❖ 정부·지자체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.

- (주거·교통) 관계부처 협업으로 주거환경(세컨드홈, 지역활력타운 등) 개선
    - 주거-수산업자리 연계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 검토, 하수도 확충 등
    - 섬 주민 여객선 운임 경감, 생필품 운송 지원으로 소외도서 제로화
  - (의료·교육·복지) 섬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, 비대면 진료 '섬 닥터' 도입
    - 교육발전특구 연계 정착 인센티브 발굴,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
  - (정보제공) 정착 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고도화, 스타귀어인 발굴\* 등 추진
- \* 귀어촌 스토리, 정착 성공 노하우 공유, 일반 국민 관심 제고 콘텐츠 운용 추진

## IV 향후 추진계획

추진 과제		일정	소관부처
<b>1.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거점 조성</b>			
1	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체계 개편	~'24	기재부·해수부
2	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도입	~'25	해수부
3	어항 통합개발 및 수익시설 규제완화	~'24	해수부
4	부산·인천 항만재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	~'28	해수부
5	수산물클러스터 확대	~'30	해수부
6	지역별 바다생활권 특화전략 마련	~'25	해수부, 행안부, 지방시대위원회 등
<b>2.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</b>			
1	TAC 전어선 확산 등 어선어업 규제 혁파	~'27	해수부
2	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수거	'25~	해수부, 해경
3	양식장 신규개발(2,700ha)	'24	해수부
4	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개발 보급	'25~	해수부
5	마을어장 심사평가제 도입	~'27	해수부
6	귀어학교 확대 등 수산 교육	계속	해수부
7	어선은행 도입 추진 및 양식시설 표준모델 마련	'25~	해수부
8	어선·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	~'27	해수부
9	어촌계 가입완화 인센티브, 정착지원금 등	계속	해수부
<b>3. 어촌·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싶은 바다생활권</b>			
1	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(숙소개선)	~'27	해수부
2	코리아둘레길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연계 추진	'25~	문체부, 해수부
3	어촌형 위케이션(漁케이션) 확대	~'24	해수부
4	소규모 관광단지와 해양레저, 어촌관광 연계	계속	문체부, 해수부
5	해양치유 지구 지정	'24~	해수부
6	국민안심해안을 통한 국민을 위한 공간(공원 등) 조성	~'27	해수부
7	등대를 해양문화관광공간으로 재탄생	'25~	해수부
8	해양치유, 생태관광, 반려해변 등 콘텐츠 개발	계속	해수부
9	해양레저거점 확대	~'27	해수부
<b>4.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좋은 바다생활권 조성</b>			
1	정착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및 정보간 연계	'25~	관계부처 합동
2	인구감소지역 3종세트 세컨드홈 연계 생활인프라 구축	'24~	관계부처 합동
3	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	'25~	해수부
4	어촌지역 빈집 활용, 하수도 등 기초생활 개선	계속	관계부처 합동
5	지역활력타운 조성 추진	'23~	관계부처 합동
6	어촌복지버스, 섬닥터, 교통권 등 섬·도서 개선	'24~	해수부
7	해양수산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정착지원	'25~	교육부, 해수부
8	수산공익직불제 합리화 및 금융안전망 확보	'24~	해수부
9	외국인력과 어촌 주민 간 상생체계	계속	해수부

## 순 서

I. 추진배경 및 경과 .....	1
II. 문제점 및 그간 정책의 한계 .....	3
III.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.....	4
IV. 추진전략 및 목표 .....	5
V. 추진 방안 .....	6
1.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거점 조성 .....	6
2.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....	8
3. 어촌·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.....	10
4.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어촌·연안 .....	12
VI. 향후 추진계획 .....	14

## I. 추진배경 및 경과

❖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·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인구소멸 진행 중

□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인구감소\* 시대로 진입하였으며, 고령인구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
\* 총인구/고령인구(만명) : '22년 5,167 / 898 → '40년 5,006 / 1,715 → '72년 3,622 / 1,727

○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중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('21, 행안부),  
어촌·연안이 있는 74개 시·군·구 중 31개(41%)가 인구감소지역

□ 어촌의 어가인구 감소율(△27.5%)은  
농가인구 대비 약 3배 높으며,  
고령화율은 전국 대비 2.5배 수준

\* 어가인구 : '18년 12만명 → '23년 8.7만명(△27.5%) /  
농가인구 : '18년 231만명 → '23년 208만명(△9.9%)

\*\* 고령화율(전국/어촌) : '10년 9.1% / 23.1% →  
'15년 13.1% / 30.5% → '23년 18.2% / 48%



☞ 현 추세 지속 시 '45년에는 어촌의 87% 소멸 전망('22, KMI)

❖ 어촌이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 
어촌주민, 수산업 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

□ 어촌·연안 등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 
하기 위해 토크콘서트 연·어·특(Talk) 개최

\* ①남해권 귀어촌 확대(2.28), ②동해권 해양레저·관광(3.18),  
③서해권 수산업 부가가치(4.18) 주제로 민생현장과 소통

○ 어촌주민, 해양·수산업 종사자, 귀어희망자 등  
200여명과 논의하여 85개의 아이디어 등 발굴

☞ 일자리·주거 패키지 지원,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 
수산업 외 어촌주민 지원 필요 등 아이디어 제안





## 〈 어촌·연안의 가치〉

### ❖ 어촌은 수산물 공급기지이자 90만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터전

※ 어촌 : 하천·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 
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·면·동(상업·공업지역 제외) (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)

□ (수산물 가치) 수산물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\*이자, 저탄소·친환경 식품\*\*으로 차세대 미래 식량(블루푸드, Blue food)으로 주목

\* 수산물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25%이며,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63.3kg(세계 1위),

\*\* 수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블루푸드에 주목(Nature지)

□ (어촌의 현재) 368만톤(세계 12위), 9.3조원의 수산물('23년)을 생산하고,  
김, 참치 등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불을 달성

○ 63,000여척의 어선, 28만ha(서울면적의 4.6배)의 양식장(마을어장 포함),  
2,049개 어촌계에서 90만 국민이 수산업 종사자\*

\* 총 905,448명('21) : 수산물 생산(52만명), 가공업(4.4만), 유통업(13만), 서비스업(19만) 등

### ❖ 연안은 '바다'를 활용한 경제·생활의 터전이자 휴식할 수 있는 쉼터

※ 연안 : 연안해역(바닷가·영해), 그리고 연안해역으로부터 500m이내 육지(연안관리법)

□ (경제) 15,285km의 해안선\*(도서 포함)과 43.8만km<sup>2</sup>의 해역\*\*에서  
수산업, 해운·항만, 해양레저·관광 등 경제적 가치 창출

\* 서울-부산(약 320km) 거리의 24배 길이 / \*\* 국토 면적 약 10만km<sup>2</sup>의 4배

□ (생활) 연안지역 시·군·구(주민등록기준)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27.5%,  
1,416만명이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

□ (휴식) 어촌과 연안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9억 9천만명으로,  
전체 관광객(28억명)의 71%, 관련 매출액은 37조원('22년 기준, KMI)

\* 서핑 중심지로 거듭난 강원도 양양은 인구(2.8만명)의 500배가 넘는 1,638만명 방문

□ (해양주권) 영해(기선으로부터 12해리)와 배타적경제수역(200해리)을  
설정하는 기준으로서 해양영토 주권의 시작점

## Ⅱ. 문제점과 그간 정책의 한계

❖ **어촌**은 열악한 정주여건, 낮은 어촌 소득원, 진입장벽 등이 소멸원인

- (정주여건) 주거·의료·복지·교육·교통 등 취약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섬·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·농촌에 비해 낮은 수준\*

\* 삶의 질 만족도 조사 : 도시(6.3) > 농촌(5.7) > **어촌(5.2)** > **섬 지역(3.6)** ('23, KMI, KREI)

- (소득원) 수산물(원물) 생산 일자리가 대부분이고, 1차산업의 낮은 부가가치로 인해 어가 평균소득도 도시 대비 67% 수준\*

\* 어가 평균소득 : 5,291만원 / 도시근로자(3인이하) 가구 평균소득 : 7,811만원('22년)

- (진입장벽) 폐쇄적인 어촌계 성향, 어선·양식장 창업비용(약 3~10억원) 등이 어촌 개발과 수산업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

❖ **연안**은 계절적 성수기, 복합 관광시설 미비 등으로 추가적인 가치창출 한계

- (계절성) 수영, 서핑, 해수욕 등 대부분 해양레저가 여름철에 집중

- (관광실태) 국내 마리나는 요트 계류에 한정되어 있고, 선박관리, 숙박, 레저 등 다기능 복합관광시설\* 미비('22, 한국관광공사)

\* 美 LA '마리나 델 레아'는 4,500척의 마리나, 6개 호텔과 6,000개 숙소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

- (콘텐츠 연계) 개별 관광지 중심이기에 체류하면서 즐길 콘텐츠 부족

❖ 기존의 수산물 생산기반 어촌 활성화를 넘어 어촌·연안 활성화 필요

- (그간 어촌대책) 수산업 기반시설(어항, 방파제 등)에 대한 투자에 집중

○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, 양질의 일자리 부족, '어촌'의 낙후된 이미지\* 등으로 신규인력 유입에 한계\*

\* '삼시세끼 어촌편', '웰컴투 삼달리' 등 대중매체에서 묘사된 어촌은 대부분 낙후

\*\* 귀어현황 : ('15년) 1,446명 → ('20년) 1,197명 → ('22년) 1,256명

👉 소멸위기에 직면한 '어촌'과는 달리 '연안'지역은 해양레저·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존과 다른 **새로운 접근 추진**

### Ⅲ.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

❖ ‘어촌’과 ‘연안’을 통칭하는 ‘**바다생활권(어촌+연안)**’ 중심으로  
청년 등 **신규인력**의 관심을 유도하고, 수산·해양레저 등 정책을 연계

□ (바다생활권 의미) ‘어촌’과 ‘연안’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·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,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

\* ‘어촌’의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직관적 이미지 부여

○ (정책범위) ‘어촌’과 ‘연안’에서 실거주하는 국민 390만명\*이 살고, 어촌·연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을 찾는 공간

\* 어촌 조사구역(어항과 배후지역 등) 내 통신망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추정(KMI)

○ (경제·생활) 수산업 뿐만 아니라 가공·유통 등 연관산업, 해양레저·관광 등 ‘바다’를 활용하여 직·간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

- 어촌 매출액 2.7조원 → 바다생활권(어촌+연안) 매출액 40조원('22년)

□ (기대효과) ‘어촌’과 ‘연안’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

○ (어촌소득 확대)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을 해양관광객으로 보완

○ (만족도 제고) 연안을 찾은 해양 관광관광객이 어촌에서 체험형 콘텐츠, 수산물 먹거리 만족도 제고

👉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‘**살고 싶고,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**’ 조성

< 바다생활권 이미지(안) >



## IV. 추진 전략 및 목표

비전	<p>풍요롭게 살 수 있고, 즐겁게 찾고 싶은 <b>바다 생활권(어촌+연안)</b>  <b>바다</b>에서 시작되는 <b>민생·경제 활력 제고</b></p>		
목표	<p>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 거점 확산</p>	<p>바다생활권 매출액 '22년 40조원 → '27년 50조원</p>	<p>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확산</p>
정책 방향	<p>경제·생활 중심지인 테마별 <b>바다생활권 거점</b>을 조성하고, 살기 좋은 <b>어촌·연안 연결벨트</b> 구축</p>		
세부 추진 과제	<p><b>전략 1</b>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 거</p> <p>① 어촌·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: 민간투자 유치 확대          ② 도시형 바다생활권 : 부산, 인천 등 → 해양수산 융·복합 기능 강화          ③ 지역형 바다생활권 : 지자체 맞춤형 특화전략 마련</p>		
	<p><b>전략 2</b>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</p> <p>① 스마트·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의 매력도 제고          ② 어촌계(2,049개) 어장 활용 수산업 일자리 개방 추진          ③ 청년 등 신규 인력 진출 확대 ('22년 1,256명 → '27년 1,800명)          ④ 부가가치 창출로 수산업 소득 증대</p>		
	<p><b>전략 3</b> 어촌·연안 관광을 연계하여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</p> <p>① 어촌에서 즐기는 체험 여행(체험형)          ②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바다쉼터(힐링형)          ③ 레저관광 연계로 머물고 싶은 바다여행(해양레저형)</p>		
	<p><b>전략 4</b>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</p> <p>① 주거·교통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        ② 의료·교육·정주여건 등 복지체계 개선          ③ 국민에게 편리한 정보 제공체계 구축</p>		

## V. 추진방안

### 1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거점 조성



어촌·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: 경제·생활 거점



도시형 바다생활권 : 해양관광 거점

#### ① 어촌·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: 민간투자 유치 확대

- (사업개편)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와 결합하여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하면서, 다양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

\* 투자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민간투자 수요 적극 발굴

- 거점 어항·어촌에 대규모 민간투자와 연계한 수산물 가공·유통 등 경제·생활 인프라 지원 집적화하여 거점기능 강화

#### 【경제거점 사례 : 양양 수산항】

- (현황) 강원 양양군 수산항은 대표 미항으로 어촌체험마을, 요트마리나(110척) 구축
- (민간투자 : 총 5,956억원) 종합휴양리조트 조성사업, 양양-울릉 정기여객선 등
- (정부재정) 어촌 관광객 숙박시설, 어촌마을 특산 수산물 판매관 등 복합생활시설 조성

- (어항 다변화) 민간투자 등 활성화를 위해 어항 내 연구시설(신재생 에너지 테스트베드 등), 수익시설(식당, 쇼핑몰 등) 등 설치 규제완화

- (기회발전특구) 어촌 국·공유지 활용 (약 5,800만평), 인센티브 발굴 등을 통해 해양·수산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\* 추진

\* 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촌 맞춤형으로 도입





## ② 도시형 바다생활권 : 부산, 인천 등 → 해양수산 융·복합 기능 강화

- (통합형 해양관광) 놀거리(해양레저), 볼거리(관광·예술), 쉴거리(리조트), 먹거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
- (도시형 관광허브) 지역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으나, 기능이전 등으로 유향화된 항만부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

- (부산) 부산항 북항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, 북항 5부두 등 주변지역 재개발까지 연계하여 신해양산업 메카로 육성

\* 부지조성(~'24) 후 오페라하우스 등 랜드마크 건설, 트램 도입, 5부두(자성대) 이전 등 추진(~'27)



- (인천)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는 크루즈, 마리나 등 복합레저 공간으로 인천 내항 1·8부두는 한류(K-컬처) 문화거점으로 재개발

- (수산물클러스터) 수산물 원물(元物) → 수산 식품산업 전환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업 가공·수출 거점 조성

- 수산식품 개발 R&D부터 가공·수출 집적화 단지를 유통이 용이한 도심지에 조성하여 시너지 창출('24년 2개소, 목포·부산 → 확대)

\* 기업 성장단계별 수출 지원(제품디자인, 국제인증 등), 신제품 개발, 마케팅 지원

## ③ 지역형 바다생활권 : 지자체 맞춤형 특화전략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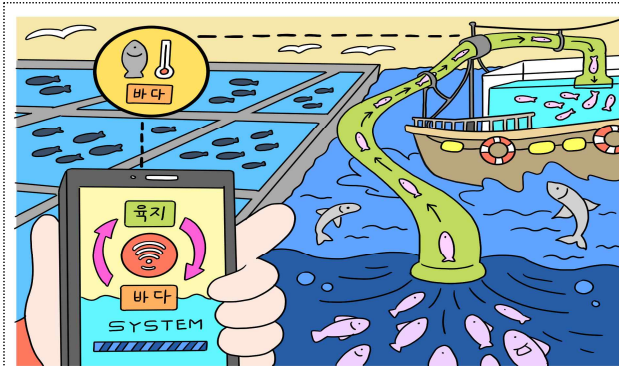
- (특화전략) 지자체별 발전계획 방향에 맞추어 어촌·연안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바다생활권 특화전략 마련(~'25.上, 지자체 협업)

- 특화전략 기반 어촌·연안·해역 활용계획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

- (인구감소지역 우대) 어촌·연안지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(31개소)에서 해양·수산 공모사업, 어촌·연안·해역 활용신청 시 가점 등 우대

- (지역발전투자협약\* 발굴)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

\*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협약을 체결하고,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



스마트·자동화 혁신으로 수산업 매력 제고



수산물 생산-가공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

### ① 스마트·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의 매력도 제고

#### ○ (어선어업) 각종 규제효과(50%,~'27)와 어업디지털 전환 추진

- (단기) 규제를 절반으로(50%) 효과\*(~'28)하고, 총허용어획량\*\*(TAC) 전 어선 확산('27~), 자원관리를 위해 감척어선 활용한 불법어구 수거

\* 금어기·금지체장·어구사용량 등 어선어업과 관련된 규제 대폭 완화 등

\*\* TAC(Total Allowable Catch) 제도 : 자원량에 맞는 적정 어획량을 설정, 그 범위 내 어획

- (중장기) AI·빅데이터 도입 등 어업 디지털화를 통해 어선어업 생산성·안전성 제고 추진

#### ○ (양식업)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양식장을 개발\*하고, 양식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단계적 스마트·자동화 기술 개발·보급 추진

\* 김 수출 확대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김 양식장 2,700ha 추가개발('24~)

- (단기) 어류사료공급·출하·중간육성장\*, 패류채취·깍데기 분리·운반, 해조류채취·종자배양 등 단순 작업부터 기계화·자동화 전환

\* (기존) 치어~성어(1kg이상) : 1년 이상 → (개편) 치어~중간육성(10cm)~성어 : 6개월

- (중장기) 자동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AI를 접목하여 원격으로 관리 가능한 품목별 표준형 스마트 양식장 개발 및 보급 추진

\* "표준형 스마트 양식장 모델('25~'30)"을 품목별로 개발하고 현장 실증 → 보급

#### ○ (내수면) 아쿠아포닉스(양식+수경재배), 스마트 전환 등 생산성 제고

## ② 어촌계(2,049개) 보유어장\*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

- \* 어촌계 마을어장 119,964 ha, 어촌계 양식장 126,212 ha (총 24만ha 서울시 4배 넓이)
- (마을어장\*) 면허 심사·평가제 도입과 함께 청년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, 유형별(생산형, 자원조성형, 레저개발형) 이용계획 수립
- \* 수심 5~7m 이내 연안해역에서 패류, 해조류 등 수산물을 관리·조성하여 채취
- (양식장)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양식장은 신규인력, 전문 양식업자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(공공기관 중개) 활성화

## ③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출 : '23년 귀어촌 1,256명 → '27년 1,800명

- (기술교육) 수산업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확대('23년 7개 → '24년 8개), 미래 어선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선원(해기사) 양성 확대
- (진입장벽 완화) 신규인력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어선·양식장 임대 지원(어선 : 25척/양식장 : 10개소)을 확대하고, 어선은행\* 도입 검토
- \* 유희어선 매입 후 임대·매매 등 지원, 감척어선 공공목적 활용 등을 총괄
- (정착지원)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, 귀어촌인을 위한 창업대출·정착지원금 확대 등 어촌정착 유도

## ④ 수산 연관산업 집적화·부가가치 창출로 수산업 소득 증대

- (양식 집적화) 양식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-재활용까지 연계\*한 품목별 양식단지 구축(6개소, ~'27)
- \* (예시) 멍게, 굴 등을 어항과 배후단지에서 양육과 함께 가공·유통까지 통합개발
- (수출기업 육성) <sup>초보→성장→고도화</sup>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바우처\*를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제공하여 천만불 수출기업 육성('23년 35개사→ '27년 100개사)
- \* (수출바우처) 기업 성장단계별 수출 지원(제품디자인, 국제인증, 마켓테스트 등), (새싹기업 도약지원)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개선, 브랜딩 등 마케팅 지원





체험형 관광으로 즐기는 바다생활권

해양레저·관광으로 즐기는 바다생활권

### ① 어촌에서 보고 즐기는 체험 여행(체험형)

- (어촌체험) 어촌체험휴양마을(132개) 스탬프 투어, 호텔급 숙소로 시설개선, 여행 플랫폼 연계 할인 등으로 어촌관광객 유치('24~)
- (어촌문화·관광) 코리아둘레길(문체부)·섬자전거길(행안부) 여행자가 인접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쉴 수 있도록 연계하여 바다여행길 활성화
- (어업유산) 제주 해녀, 하동·광양 재첩잡이 어업 등 글로벌 유산으로 인정\*받은 국가중요 어업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확대 검토
  - \* 어업 분야로는 세계식량기구(FAO)에서 세 번째로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('23)
- (漁케이션) 어촌·연안 유희시설을 활용한 위케이션(現 11개소) 활성화
  - \* (인천) 포내마을, 이작마을, (충남) 삼시도마을, (전북) 방축도마을, (전남) 돌머리마을, 북고마을, (경남) 지족마을, 다대마을, (경북) 창바우마을, (제주) 사계마을, 김녕마을
- (인프라연계) 어촌·연안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\*와 관광 연계 추진
  - \* 기준을 완화(50만㎡→ 5만~30만㎡)한 소규모 관광단지(관광숙박시설 공공편의시설 조성문체부·지자체)

### ②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바다심터(힐링형)

- (해양치유) 치유센터(5개소)\* 조성, 프로그램 개발, 해양치유지구 지정
  - \* 완도('23.11 준공), 태안('24.말 준공), 울진·경남 고성('25.말 준공), 제주('24년 신규)
- (생태관광)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, 해양보호구역 30%까지 확대(~'30), 맞춤형 마을관광,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추진

- (국민안심해안) 재해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육역의 토지(완충공간)를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공간(공원 등)으로 조성

\* ('24년) 동해·서해권 2개소(강원 강릉, 전북 고창) 시범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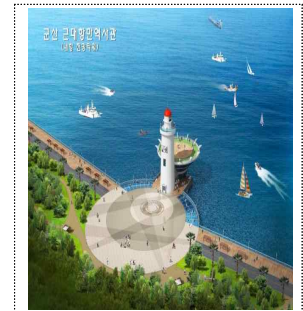
- (반려 해변) 기업·시민과 함께 환경을 개선하는 반려해변(149개소)\* 활성화

\* 단체, 기업, 학교 등이 해변을 입양하고, 해양쓰레기 정화 등 캠페인 수행

\*\* (사례) 진에어는 제주 영알해변 입양 후 연안생태계 보호활동 및 기내방송 홍보 실시

- (휴식관광) 유희화된 항만을 국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, 바다 조망권 명소인 등대를 해양문화 공간으로 재탄생\*

\* 등대는 연평균 378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 중



### ③ 해양레저관광 연계로 더 머물고 싶은 여행(레저형)

- (해양레저)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서핑, 스쿠버 다이빙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을 확대('23년 7개 → '24년 8개)하고, 인근 어촌관광과 연계

\* ①시흥(~'24), ②군산(~'24), ③보성(~'25), ④고성(~'24), ⑤제주(~'25), ⑥경주('24~), ⑦보령('24~), ⑧공모 중('24.4.~6월)

- 요트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저선박 전국 일주항로 조성, 민간투자 유치와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\* 추진

\*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에 마리나항만 개발,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음료 판매 허용 등



- (테마 해수욕장) 지역별 해수욕장 및 배후공간을 활용한 레저스포츠, 관광자원,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발굴\*

\* (레저) 서핑(양양) / (문화) 반려동물 동반 등(강릉, 거제) / (힐링) 치유(태안 등) / (자연생태) 생태·갯벌체험(신안, 부안) / (향토체험) 어촌지역축제(서산, 남해)



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좋은 어촌



편리하게 제공받는 귀어촌 정보

## ① 주거·교통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

### ○ (주거)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어촌·연안지역 주거환경 개선

- (어촌·연안 별장)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혜택\*과 연계하여 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오션뷰 어촌·연안별장 활성화 추진

\*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('24.下)

- (청년귀어종합타운) 어항 유희부지 등에 청년 주택단지(30호 미만)와 신규 면허양식장 등\*을 연계한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 검토

\* 신규 양식장 면허, 스마트양식클러스터, 어선·양식장 임대 등 일자리 창출

- (주거-생활연계) 국토부,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업\*으로 주택단지와 생활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 추진('24년 10개소)

\* 국토부, 행안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복지부, 중소벤처부, 교육부, 문화부 (8개 부처)

- (기초생활 개선)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 리모델링, 하수도 인프라\* 등 생활여건 개선 추진

\* 노로바이러스 등 예방을 위해 패류생산해역 인근 어촌지역 하수도 시설 우선 개선

### ○ (교통) 섬 주민 여객선 운임 경감, 소외도서 제로화\*, 생필품 운송\*\* 지원

\* 40개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위해 유류비 등 운영비용 및 안전관리 지원

\*\* 섬 주민 생활여건 제고를 위해 생필품(유류, 가스, 연탄 등) 해상운임 지원

## ② 의료·교육·정주여건 등 복지체계 개선

- (의료) 230개 섬·도서지역을 찾아가는 '어촌복지 버스'를 도입('24~) 하고, 비대면진료 「섬 닥터\*」 도입,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시행 등
  - \* 도심 접근이 어려운 섬 등 도서지역 마을회관에서 화상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
- (인재양성) 수산계 고교의 협약형 특성화고교 전환 지원과 함께 해양수산업계 진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추진
- (교육여건 개선) 바다생활권에 조성되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발굴\* 추진
  - \* (예시) 해양수산 관련 기관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 소재 지역인재 가점 확대 등
- (직불제) 경영이양, 소규모 어가 등 수산공익직불제 지원
- (금융 안전망) 양식장 전기료, 유류비 등 수산업 경영체 생활안정 지원
- (외국인 상생) 어촌·연안지역 주민과 외국인력과의 상생체계 마련
  - (유입·교육) 관계부처 협업으로 수산업 외국인력의 안정적 유입과 송출·입 과정에서 은퇴어업인 등을 활용한 수산업 기술 교육
    - \* 현지(송출국)에서 수산업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현장근로 적응 지원
  - (정착) 주민과 외국인이 화합할 수 있는 다문화 복합공간 조성
    - \*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을 다기능 인프라 시설로 활용

## ③ 국민에게 편리한 어촌정착 정보

- (정보제공 체계) '귀어촌종합센터'를 통해 온·오프라인 상담, 일자리·범부처 지원 정보를 제공('24~)하고, 지능형 검색시스템으로 고도화
- (스타 귀어인 발굴) 손쉽게 귀어촌 사례를 접하고,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
  - \* 귀어촌 스토리, 정착 성공 노하우 공유, 일반 국민 관심 제고 콘텐츠 운용 추진

## VI.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	일정	소관부처
<b>1.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·생활거점 조성</b>			
1	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체계 개편	~'24	기재부·해수부
2	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도입	~'25	해수부
3	어항 통합개발 및 수역시설 규제완화	~'24	해수부
4	부산·인천 항만재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	~'28	해수부
5	수산물클러스터 확대	~'30	해수부
6	지역별 바다생활권 특화전략 마련	~'25	해수부, 행안부, 지방시대위원회 등
<b>2.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</b>			
1	TAC 전어선 확산 등 어선어업 규제 혁파	~'27	해수부
2	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수거	'25~	해수부, 해경
3	양식장 신규개발(2,700ha)	'24	해수부
4	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개발 보급	'25~	해수부
5	마을어장 심사평가제 도입	~'27	해수부
6	귀어학교 확대 등 수산 교육	계속	해수부
7	어선은행 도입 추진 및 양식시설 표준모델 마련	'25~	해수부
8	어선·양식장 임대 지원 확대	~'27	해수부
9	어촌계 가입완화 인센티브, 정착지원금 등	계속	해수부
<b>3. 어촌·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싶은 바다생활권</b>			
1	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(숙소개선)	~'27	해수부
2	코리아둘레길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연계 추진	'25~	문체부, 해수부
3	어촌형 위케이션(漁케이션) 확대	~'24	해수부
4	소규모 관광단지와 해양레저, 어촌관광 연계	계속	문체부, 해수부
5	해양치유 지구 지정	'24~	해수부
6	국민안심해안을 통한 국민을 위한 공간(공원 등) 조성	~'27	해수부
7	등대를 해양문화관광공간으로 재탄생	'25~	해수부
8	해양치유, 생태관광, 반려해변 등 콘텐츠 개발	계속	해수부
9	해양레저거점 확대	~'27	해수부
<b>4.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좋은 바다생활권 조성</b>			
1	정착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및 정보간 연계	'25~	관계부처 합동
2	인구감소지역 3종세트 세컨드홈 연계 생활인프라 구축	'24~	관계부처 합동
3	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	'25~	해수부
4	어촌지역 빈집 활용, 하수도 등 기초생활 개선	계속	관계부처 합동
5	지역활력타운 조성 추진	'23~	관계부처 합동
6	어촌복지버스, 섬닥터, 교통권 등 섬·도서 개선	'24~	해수부
7	해양수산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정착지원	'25~	교육부, 해수부
8	수산공익직불제 합리화 및 금융안전망 확보	'24~	해수부
9	외국인력과 어촌 주민 간 상생체계	계속	해수부